

### ◎한국 IPG의 활동

· 제30회 한국IPG세미나 '중국(홍콩 포함)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 주제로 개최

### ◎IP를 알자

한국IP뉴스 06  
「신·지식재산의 최전선은 지금」 07  
- 한국의 심판청구기간, 재심사청구기간 연장  
- 일본 소설 '번두리 로켓'에서 볼 수 있는 특허 소송의 이모저모

### NEW 한국IPG 회원 등록

한국 IPG 회원등록은 아래 URL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jetro.go.jp/world/asia/kr/ip/ipg/>  
한국 IPG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특허청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회비는 없습니다.

### 사무국으로부터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제트로 한국 지재 웹사이트(<https://www.jetro.go.jp/korea-ip>)에 최신 한국 지식재산 뉴스와 법 개정 정보, 판례 해설 등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AUTION

(한국 IPG INFORMATION)에 게재된 기고·번역문 등은 모두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게재된 것이므로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 QUIZ 퀴즈를 맞춰봅시다!

2021년 한국 특허청에 대한 산업재산권출원원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총출원 건수는 몇 건일까요?

①약 49.3만 건    ②약 59.3만 건    ③약 69.3만 건

※ 정답은 본지 5페이지 하단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한국 IPG의 활동

## 제30회 한국IPG세미나 '중국(홍콩 포함)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 주제로 개최



최근 한국IPG에서는 연 4회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의 지식재산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진출한 일본 기업이라면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 외 국가의 지식재산 정보도 수집하여 글로벌한 지식재산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2022년 1월 28일 개최된 제30회 한국IPG세미나(일본 특허청 위탁 사업)에서는 베이징과 홍콩의 지식재산 전문가를 초빙하여 중국(홍콩 포함)과 한국 지식재산 업계의 최신 동향을 폭넓게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중계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 ◎중국(홍콩 포함)의 최신 지식재산 동향

#### 중국 경제 정책 내 지식재산의 위치

중국의 연구개발이 지속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21년 연구개발비는 2조 7,864억 위안(전년 대비 14.2% 증가)으로, 이는 미국에 이은 세계 2위 규모에 해당합니다. 중국과학기술부에서는 기초연구비의 연간 평균 증가율이 16.9%로 상승하고 기초연구가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처음으로 6%



JETRO 베이징사무소  
지식재산부장  
야마모토 에이이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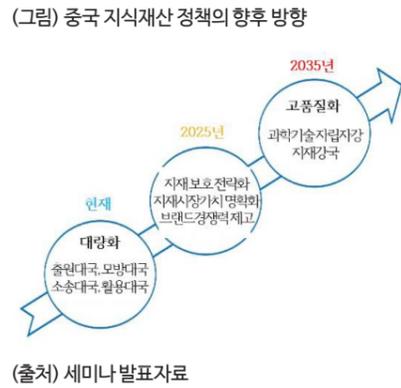


JETRO 홍콩사무소  
지식재산부장  
마쓰모토 가나메

를 초과했다고 발표하여, 과학기술강국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중국의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 성과로 최근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세계 1위, 논문 발표 수는 세계 2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한국IPG의 활동

지식재산 정책은 전 세계적인 경제정책과 연동되는데, 경제정책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바로 혁신정책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은 ‘혁신 보호가 곧 지식재산 보호’라고 발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21년 9월,



13년 만에 ‘지식재산권강국건설강요(2021~2035)’라는 장기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국내 및 국제 쌍순환을 주요 테마로 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십사오계획)’(2021년 3월)에 근거하여 2021년 10월에 ‘십사오’지식재산권지재보호운영계획(지재 십사오)도 발표되었습니다. 해당 계획에 제시된 대방침을 살펴보면, 대내적으로는 자주창신(自主创新), 대외적으로는 거버넌스 강화라는 방향성이 지식재산 정책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과제별로 보는 정책 동향

1. 출원 급증의 폐해

2020년 중국의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6.9% 증가한 약 149만 7,000건이었습니다. 2020년 PCT출원(국가별) 건수 역시 증가하여 역대 최고치인 약 6만 9,000건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2020년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29% 증가한 약 292만 7,000건, 디자인(외관 설계)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8.3% 증가한 약 77만 건, 상표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9.3% 증가한 약 934만 8,000건을 기록하여, 모두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대량 출원에 의한 비정상출원 및 모인출원이 발생하고 있어, 해외로부터 출원 적정화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미국특허청(USPTO)의 보고서(2021년 1월)에서는 중국의 출원 장려 및 보조 정책이 국내외 등록 기관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고품질의 출원 및 심사 인프라를 정비하기 위해 사용자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적절한 품질 및 신속한 심사 체제 환경을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여전히 많은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조치(예: 징벌배상제도)의 실효성이 과제입니다. 침해행위가 점점 교묘해지고 소액화되면서, 정책과 대응책이 헛바퀴 돌듯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침해 사건 건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심리 체제와 품질 확보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인 안건의 선별과 효율 및 품질 확보의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행정 분야에서는 재판으로 진행되기 전에 중재, 조정, 공중, 감정의 형태로 사전 처리를 최대한 진행하여 사법 분야의 재판 건수를 줄여 나가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모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EC(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증대한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엄격한 지식재산 침해 대응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신기술과 비즈니스의 급성장

디지털화의 진전과 신흥 중국 기업의 급성장으로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가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법 제도로는 충분한 보호 및 활용이 어렵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이 중 데이터 지식재산 보호와 관련해서는 상술한 지재 십사오에서 특히 강조되었으며, 입법연구와 법령정비, 국제규정 마련,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안을 고려한 보호와 활용 촉진이 강조되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연구 보고에서도 신속한 규범적 문서 수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십사오계획에서는 오픈소스 지식재산제도의 정비에 대해, 디지털 기술의 오픈소스 커뮤니티 발전 지원과 소스코드 및 하드웨어 설계 등 오픈화를 장려할 것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중국 정부는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방법, 인공지능(AI)에 의한 산출물의 지재권 보호 규칙 정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4. 활용되지 않고 있는 대학교 및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중국에는 ‘지재 운영’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다소 넓은 범위의 지재 활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지재 운영에는 크게 4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로, 디지털 전환(DX)입니다. 대량 축적된 지재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거나 데이터 표준화 등을 진행합니다. 둘째로, 지재 유통을 촉진시킨다는 관점에서 전리법(특허법)에 이른바 라이선스 오브 라이트 제도가 도입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는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실시허락할 뜻이 있음을 당국에 등록하여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셋째로, 지재금융 시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13차 5개년 계획의 수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으로 신용을 보증해 지재 담보 용자를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책 문서에서는 다소 완화된 표현, 예를 들어 지재강국강요에서는 ‘온당하게’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다수 지적되었습니다. 착실하게 위기관리를 하면서 시책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표현이라 여겨집니다. 넷째로, 중국에서는 대학교의 지식재산을 국유자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를 용이하게 사용하도록 일부 지분을 연구자에게 부여하거나, 대학교를 지식재산 제공 측, 중소기업을 지식재산 이용 측으로 하여 활용하게 만드는 프로젝트를 실시해 지방정부 간 경쟁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재 활용 이외에도 기업 경영 중 지재 관리 능력 제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ISO56005는 중국 정부가 제안 및 주도하여 수립한 ISO라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경영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상장 규칙과 지식재산의 관계에 대해 깊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에서는 기업지배구조 지침(Corporate Governance Code)의 개정이 이슈가 되었는데, 지재 정보 공개 규칙을 엄격하게 실시한다는 내용이 정책 문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장 전후로 지재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5.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재강국강요의 6대 항목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 지식재산법의 ‘역외적용’을 추진하겠다는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주목됩니다. 최근 표준필수특허(SEP)와 관련하여 중국 기업과 외국 기업이 여러 국가에서 병행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재판 관할권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특허권에 근거하여 해당 국가의 시장, 마켓, 침해 상황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판단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 한 국가의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화해 검토 등 타국에서의 분쟁 대응에 영향이 미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 간에는 자사에 유리한 판단이 내려질 국가나 그 국가의 지역 법원을 선택하는 포럼쇼핑이 자주 행해집니다. 중국 정부는 기업이 선호하는 국제 지식재산 소송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의 판결이 세계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시도와 연계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도로는 소송 금지가처분(ASD)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처음으로 지재분야에서 소송금지가처분을 명한 이후, 지방 법원 수준에서도 동일한 명령 및 심화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표준필수특허의 경우 라이선스 비용이 국가별이 아니라 글로벌하게 설정되어 있는 반면, 소송의 경우에는 각국의 법원이 해당 국가의 시장을 바탕으로 계산한 해당 국가의 라이선스 비용에 근거하여 배상금 등을 산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 법원이 글로벌 라이선스 비용을 산정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 이 역시 중국 재판 결과의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 중 하나로 보여집니다.

홍콩의 지식재산 정보

1. 새로운 특허 제도 도입

2019년 12월, 홍콩에 새로운 특허 제도인 ‘원수특허제도(OGP)’가 도

입되었습니다. 기존 특허제도인 ‘표준전리제도’는 지정 지재 당국(중국, 영국, (영국을 지정국으로 하는)유럽) 중 어느 한 곳에 특허를 출원한 후 홍콩에 출원하고, 지정 지재 당국에 등록되면 그 결과에 따라 홍콩에 부여 청구를 진행하여 홍콩 특허권이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이 기존 제도도 유지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처음으로 홍콩의 지재 당국인 홍콩지식재산권에 의한 실제 심사가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밖에 특이점으로는 새로운 제도의 이용 통계를 보면 한국의 인터넷통신판매업자 쿠팡의 이용 건수가 대단히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2. 홍콩 중재의 장단점

한편, 홍콩은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분쟁 중재지로 호평을 받고 있어 홍콩에서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홍콩국제중재센터(HKICAC)의 분쟁 중재 금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88억 달러를 기록하여,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를 상회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 4월부터 홍콩과 중국 대륙간 중재 판단의 상호 및 동시 집행, 대륙 법원에 대한 잠정조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대륙의 재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 홍콩 중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홍콩 변호사 비용이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이며, 대륙 중재보다 대륙 내 집행 시에 드는 수고(법원 승인 절차)가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PG

2021년 한국 지식재산 10대 뉴스 및 향후 전망

- 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부소장

2021년 한국 지식재산 10대 뉴스

·10위: 코로나 위기에도 한국 산업재산권 출원 지속 증가

최근 한국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건수가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에 최초로 50만 건을, 2020년에는 55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2022년 1월 11일 한국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는 592,615건(전년 대비 6.3% 증가)으로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 237,998건(전년 대비 5.0% 증가), 실용신안 4,009건(19.5% 감소), 디자인 64,787건(4.1% 감소), 상표 285,821건(10.8% 증가)으로, 특허와 상표 출원에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9위: 모바일로 출원하는 산업재산권

2020년 3월, 한국 특허청은 세계 최초로 모바일 상표 출원 서비스를 출시하여 같은 해 12월 23일, 특허 출원 및 실용신안 등록 출원, 디자

인 출원으로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2020년 말부터 모바일로 산업재산권 출원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2021년을 ‘모바일 출원 원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닌 HTML5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단말기 내 일반 웹브라우저로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그림의 실제 화면은 한국어)



출원하여 권리를 취득하였습니다. 이를 이른바 모인출원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사례는 있었으나, 이번 사례를 통해 한국 권리 취득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유명 우동 체인점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일본의 유명 우동 체인점이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며 많은 점포들이 폐점하였습니다. 그 중 몇 개의 점포가 기존 설비까지 통째로 인수되어 새로운 우동 가게로 오픈하였는데, 간판만 다를 뿐 기존과 동일한 인테리어에 비슷한 메뉴를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5위: 코로나19와 지식재산권**

2020년 10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가 코로나19 예방 및 봉쇄, 치료에 관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면제하는 이른바 웨이버(권리 등의 포기)를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을 선진국이 독점하게 되는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한국 정부는 웨이버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은 밝히지 않았으나, 2021년 봄, 웨이버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결의안 2부가 한국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한국 국회의 결의안이 TRIPS 이사회 논의를 구속하지는 않지만, 만약 결의안이 통과되면 한국 국회의 의사가 표명된 것이 되므로 향후의 향방이 주목됩니다.

**·4위: 인공지능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2021년 6월 3일, 한국 특허청은 ‘인공지능은 에디슨이 될 수 있을까? 첫 특허 심사 사례’라는 제목으로 언론 보도를 진행하여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첫 특허 출원 소식과 심사 결과를 공표했습니다. 한국 특허청은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기재한 것은 특허법에 위배되므로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정요구서를 5월 27일 통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AI 발명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에 대해 ‘AI발명전문가협의체’를 꾸려 산·학·연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국제적인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위: 디자인보호법 보호 대상 확대**

2021년 10월 21일, 한국의 개정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어 일본과 동일하게 물품에 기록 및 표시되지 않은 GUI 화상디자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개정 의장법에는 포함된 (1)‘건축물’, ‘인테리어’ 디자인 (2)관련의장제도 확대 및 (3)의장권 존속 기간 관련 내용은 한국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위: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한국은 자국 지체소송제도의 매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토를 진행하면서 독일식 ‘전문가증거조사’를 도입하고 기존의 자료 제출 명령을 강화하

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속 중이며, 앞으로 심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일본에서는 2020년 10월 시행 법 개정을 통해 사증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또한 독일법을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일 양국에서 거의 동일한 제도로 설계될 것으로 보입니다.

**·1위: 심판청구기간, 재심사청구기간 연장**

2021년 10월 19일, 한국 개정 특허법과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에는 지재 관계자들이 고대하던 심판청구기간과 재심사청구기간 연장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년 4월 20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수고와 비용을 들여 연장 수속을 거칠 필요 없이 충분한 검토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향후 전망**

**1. 단기(2022년)**

2022년 1월 3일, 한국 특허청은 ‘2022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제도’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예정’으로 기재된 부분은 발표 시점).

**(1)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 신설(2022년 3월 예정)
-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모니터링·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 진단해주는 서비스 신설(2022년 3월 예정)
-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2022년 1월)
-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새롭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각각 2022년 4월, 6월)

**(2)행정서비스 품질개선**

- 특허 분리출원 제도 도입(2022년 4월)
-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청구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2022년 4월)
- 우수 지식재산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펀드 확대 운영(2022년 2월 예정)
- IP가치평가에 대한 비용지원 확대(2022년 1월 예정)
- 24시간 챗봇 상담서비스 실시(2022년 4월 예정)

**(3)지식재산 역량 강화**

- 소상공인 대상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신설(2022년 3월)
- 특허청과 경상북도교육청이 경상북도(경주)에 발명체험교육관 개관(2022년 2월)

**2. 중장기(2022년)**

2021년 12월 말, ‘제3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22-2026)’과 ‘제1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2022-2026)’이 수립 및 공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5년 간의 한국 지식재산정책을 점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약 59.3만 건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592,615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특허가 5.0%, 상표가 10.8%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 1월 11일자 지식재산 뉴스 게재)



① 한국 특허청과 포스코, 철강·소재 기업에 영업비밀·기술보호 공동 지원

| 한국특허청 (2021.11.26)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온 (주) 포스코와 철강·소재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 보호를 위해 함께하기로 하였다. 최근 대기업과 협력사의 거래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협력사를 통한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영업비밀 보호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에 영업비밀 보호 존중문화를 조성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포스코와 특허청은 이번 협약으로 철강·소재분야 기업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강화를 적극 지원한다. 포스코는 협력사들의 영업비밀·기술보호 및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특허청의 영업비밀·기술 보호 정책에 협력하고, 특허청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영업비밀보호센터를 통해 포스코 협력사들에게 영업비밀·기술 보호 컨설팅 및 교육 등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또한, 포스코 협력사들은 자사 경영환경에 맞는 영업비밀·기술 보호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영업비밀·기술보호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② '22.1.1.로 변화하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눈여겨 보세요

| 한국특허청 (2021.12.27)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헤이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코로나 팬데믹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헤이그 공통규칙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코로나19와 같은 유행병,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정해진 기한 내에 WIPO 국제사무국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관련 증거를 제출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출원인이 디자인 등록을 받고자 지정한 국가에서 실질 심사를 받기 전, 국제사무국이 관련 서류의 하자 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였다. 국제등록부의 출원인 명의 변경 절차도 간소화하였다. 종전에는 출원인 소속 국가의 해당 관청에서 발급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야 했으나 이제는 새로운 권리자가 정당한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https://www.wipo.int/about-wipo/en/assembli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21년 지식재산출원 역대 최고치(59.3만) 기록 | 한국특허청 (2022.1.11)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해 국내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이 총 592,615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 기간인 '20~'21년 출원 평균증가율(7.7%)은 이전 10년간('10~'19) 평균증가율 3.6%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별로 살펴보면, 전년에 이어 높은 증가율(10.8%)을 보인 상표가 285,821건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특허 역시 237,998건으로 5.0% 증가하는 등 최근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외국인의 특허 출원은 '18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던 '21년도에 크게 반등(전년 대비 11.7%증가)하며 전체 출원 증가세에 힘을 보탤다.

④ 새로운 특허청 대표 누리집 1월 12일부터 공개 | 한국특허청 (2022.1.12)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 국민이 쉽고 빠르게 지식재산(IP)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청 대표 누리집(www.kipo.go.kr)을 새 단장하여 1월 12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먼저, 「맞춤정보 찾기」 메뉴를 신설하여 사용자가 즐겨 찾는 메뉴와 지식재산권 생애주기별·고객유형별 정보를 분류하여 제공한다. 사용자 접속 이력이 많은 메뉴를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 '즐겨찾는 메뉴'에 반영하고, 아이디어 출발단계에서부터 지식재산 출원, 심사, 등록단계를 거쳐 지식재산 보호, 평가, 거래이전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권 단계별 필요한 정보를 목록화 하였으며, 출원인, 대리인, 발명자, 중소기업, 교사, 학생, 대학·공공연 등 사용자별 맞춤형 정책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게 구성하였다. 또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검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웹 수집서버를 별도 구축하여, 앞으로 개편된 특허청 누리집에서 특허청 및 유관기관(총 35개)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정보를 모두 검색할 수가 있으며, 스마트폰 이용이 일상화됨에 따라 단말기 종류와 화면크기에 실시간 반응하는 반응형 웹 서비스를 구축하여 모바일 기기에서도 컴퓨터 화면과 동일한 누리집 정보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한 눈에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메인 화면 구성을 선명한 색상과 간결한 디자인으로 개선하였으며, 각 메뉴탭을 누르면 최하위 메뉴까지 한 눈에 펼쳐보이게 함으로써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을 빨리 찾을 수 있게 구현하였다.

File No.158

한국의 심판청구기간, 재심사청구기간



2021년 10월 19일, 한국의 개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일본의 의장법에 해당), 상표법이 공포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은 심판청구기간, 재심사청구기간의 연장으로 실무 상 영향이 크며 지재 관계자 분들께서 고대하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제도에 대하여

한국 특허청에 특허, 디자인(일본에서는 의장), 상표의 각 출원을 출원한 후, 심사 결과, 권리화가 인정되지 않고 거절결정(일본에서는 거절사정)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거절결정의 내용에 따라서는 권리화가 상당히 어려워 권리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만,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혹은 권리범위를 보정함으로써 권리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일양국 모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지식재산의 세계에서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절차입니다. 일본에서는 특허청 심판부, 한국에서는 특허심판원의 통상 3인의 심판관으로 이루어진 합의체가 담당하며, 거절결정 내용의 적절 여부를 엄정히 심리하고 그 결론으로 심결을 내립니다(재판관이 판결을 내리는 것과 유사합니다).

심판제도의 경우 한일 양국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특허,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에서는 권리범위(특허의 경우 명세서, 특허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 의장의 경우 도면, 사진, 모형 또는 견본)를 보정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상관없이 거절사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권리범위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청구하고, 보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2. 한국 제도의 실무 상 문제점

거절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하기까지의 기간은 국가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2008년 법 개정(2009년 4월 1일 시행)으로 심판청구기간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기간에 여유를 두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현재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외국인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특허, 디자인, 상표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은 현재, 외국인에 의한 출원의 경우에도 30일입니다. 언

어의 벽이 있는 일본 출원인의 입장에서는 검토기간이 짧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아도 친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도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은 2회에 한해 30일씩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연장을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을 할 때마다 절차의 부담이 발생하고 한국 특허청 및 대리인에 대한 비용 부담도 발생하기 때문에 지재 관계자 사이에서는 연장에 관계 없이 기간을 길게 설정해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3. 이번 법 개정 내용 및 향후 예정

이번 법 개정으로 특허, 디자인, 상표의 각 출원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및 재심사청구기간(재심사는 특허 및 디자인만 해당)이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개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은 2021년 10월 19일에 공포되었으며 2022년 4월 2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수고와 비용을 들여 연장 수속을 거칠 필요 없이 한국 특허청에 심판청구, 재심사청구가 가능하게 되므로 일본계 기업에도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본 개정은 지금까지 일본계 기업, 지재 관련 단체가 한국 정부에 건의사항 등을 통해 요청했던 경위가 있기 때문에, 실현된 점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호 해설자)

JETRO 서울사무소 부소장 츠치야 신고(일본특허청 파견)

2001년 일본특허청 입청. 통신·반도체분야 심사관·심판관, 정보기술통괄실 실장보좌, 심판과 과장보좌, 주임 상석심사관 등을 거쳐 2020년 7월부터 현직

## 일본 소설 '변두리 로켓'에서 볼 수 있는 특허 소송의 이모저모



최근 한일 양국에서는 로켓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한국에서는 10월 21일 '누리호'가 발사되었지만 위성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11월 9일 '입실론' 5호기가 발사되어 탑재된 9기의 위성을 분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로켓 발사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6개국뿐이라는 보도를 접하고 로켓 발사 기술의 고도성에 경탄하며 '변두리 로켓'이라는 일본 소설(이하 '본 소설')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의 소설가 이케이도 준이 집필한 본 소설은, 대중에게는 조금 낯선 기술과 특허의 세계를 다뤄 큰 인기를 모았으며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습니다(한국에서도 방영되었습니다). 이미 아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본 소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쓰쿠다 제작소,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역 나카시마 공업, 그리고 특허 획득에서 쓰쿠다 제작소에 선수를 빼앗긴 대기업 데이코쿠 중공업이 등장합니다. 주역인 쓰쿠다 제작소는 나카시마 공업의 공격으로부터 회사를 지켜내고, 보유 특허를 실시한 뱀브를 데이코쿠 중공업에 납품하여 결국 로켓 발사를 성공으로 이끌어 냅니다. 본고는 변리사로서 본 소설에서 엿볼 수 있는 특허 소송의 몇 가지 장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1. 특허침해소송은 비난받을 일인가?

나카시마 공업은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화해를 선택했지만, 특허 전략에서 패한 것은 아닙니다. 취득한 특허를 보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활용 방법으로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 침해소송에서의 지연 전략

나카시마 공업이 침해소송에서 선택한 주요 전략은 지연책이었습니다. 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면 쓰쿠다 제작소가 견디지 못하고 항복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지연책은 그리 쉽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소송 지연은 많은 나라의 민사소송법에서 매우 경계되고 있으며 한국의 민사소송법에서도 이전부터 증거의 적시제출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심판절차에서도 적시제출주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특허침해소송 1심 재판에는 평균 15개월이 걸립니다.

### 3. 화해금

나카시마 공업은 쓰쿠다 제작소의 역침해소송에서 담당 판사로부터 화해를 권고받았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화해금 56억 엔은, 특허사용료

에 근거해 쓰쿠다 제작소가 계산한 손해배상청구금액 70억 엔에서 나카시마 공업의 기술혁신에 의한 몫을 빼고 산출된 금액입니다.

많은 나라의 특허법은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에 대해 일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의 특허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인용액의 중간값은 600만 엔 정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의 특허법은 최근 개정에 의해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권리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손해배상액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4. 침해소송에서의 무효 주장

본 소설에서는 전혀 다루어 지지 않았으나 특허침해소송이 제기되면 피고는 침해 여부는 물론 대상 특허의 무효 사유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합니다. 실제 상황이었다면 쓰쿠다 제작소도 무효심판을 하나의 대응 전략으로 고려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나라의 특허법에는 특허권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만드는 무효심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400건 이상의 특허무효심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효가 인정되는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다소 높습니다(평균 40% 이상).

### 5. 변리사의 실력

본 소설에서 나카시마 공업의 변리사는 매우 실력 있는 변리사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넓은 청구 범위를 가진 강력한 특허를 만들어 내었기에, 나카시마 공업이 쓰쿠다 제작소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좋은 특허를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변두리 로켓'의 탄생은 일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이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도 독자를 지식재산의 세계로 이끌 재미있는 작품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 〈이번 호 해설자〉

리인터내셔널 특허법률사무소 송진오 변리사

2001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2010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수료, 2014년 도쿄이과대학 이노베이션연구과 지적재산전략전공 수료 (감수: JETRO 서울사무소 츠치야 신고 부소장(일본 특허청 파견))